

취재원 사용의 원칙과 현실:

세월호 보도를 중심으로 *

송상근**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인 초빙교수)

세월호가 침몰하자 국내언론은 정부와 전문가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취재원을 중심으로 세월호 보도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4개 신문(<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종합면 기사와 2개 방송(KBS, JTBC)의 저녁 9시 메인뉴스 등 4,312건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세월호 사고가 인적 재난에서 정치적 사안으로 변했던 과정을 감안해 사고발생 후 1개월, 사고발생 후 6개월 시점, 사고 1주기 등 국면을 3단계로 나눴다. 연구 결과, 취재원의 40% 이상이 익명으로 처리됐고 이들이 제공한 정보는 제목과 리드에 반영되지 않는 등 뉴스에서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 또 취재원이 전달하는 뉴스는 정부와 공직자 중심이고, 익명 취재원을 활용한 비판 프레임이 늘었다. 세월호와 관련해 국내언론을 재난보도 관점에서 조명하는 시도가 많았으나 저널리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취재원의 폭을 제한하고, 편의적으로 활용한다면 제작관행을 고치고 뉴스품질을 높이기 힘들므로 저널리즘 원칙의 재확인과 실천이 국내언론에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어: 언론, 취재원, 세월호 사고, 저널리즘 윤리, 재난보도 준칙

* 본 논문은 저자의 성균관대 박사학위 청구논문(2016년)을 토대로 수정 보완했으며,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2016년)에서 발표했습니다.

** sskmhj@hanmail.net

1. 문제 제기

언론이 제작하는 뉴스는 취재원과 공동 생산물이다. 정부,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뉴스로 만들므로 취재원이 없으면 취재보도는 불가능하다. 언론이 가진 힘의 깊고 어두운 비밀로 취재원이 꼽히고, 언론기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에 의해 언론의 힘이 행사된다고 설명되는 이유다(Schudson, 2011, p. 127).

뉴스의 육하원칙에서 ‘누가’는 이렇게 깊고도 어두운 비밀인 취재원을 말한다. 언론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뉴스의 나머지 5개 요소(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구체화하는 주체가 취재원이다. 따라서 뉴스제작 과정과 그 결과물인 뉴스의 이해는 뉴스 속의 취재원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취재원이 어떠한 프레임의 뉴스를 전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언론의 위기 역시 취재원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한국언론은 기술적 요인, 정치적 압력, 상업적 압력 등 3가지 원인에 의해 정체성을 도전받는 상황이다(이재경, 2013, 346쪽). 같은 종류의 정보를, 같은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모아서, 수십 년간 사용했던 방식과 똑같은 형태로 포장한 결과다(Ryfe, 2012). 같은 종류의 정보를,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니 이전과 비슷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위기는 전쟁, 테러, 재난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인명피해가 전례 없이 커서 국가차원의 트라우마가 형성되면 언론은 사실전달과 해석이라는 본연의 역할, 그 이상을 요구받는다(Kitch & Hume, 2008, pp. xi-xxiv).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고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미국언론은 다양한 목소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부, 관료, 엘리트 같은 공식적 취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했으며, 심지어는 뉴스에 논평하는 전문가 그룹조차도 지배계층에서 선택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McChesney, 2002, pp. 91-100).

미국언론의 문제가 9·11 테러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다시 확인됐듯이 한국언론의 문제 역시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다시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세월호 보도 이후에 나타난 ‘기레기’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언론이 9·11 테러 이후에 보였던 문제점을 한국언론이 세월호 보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되풀이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한국언론이 어떠한 취재원에 의존하여 어떠한 뉴스를 수용자에게 제공했는지, 그러한 뉴스는 공론장의 역할과 사회통합의 기능을 어느 정도로 수행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부, 관료, 정치권, 기업에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고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유가족은 언론이 오보를 많이 냈고,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슈가 아니라 진실을 보도해달라는 사고 초기의 주장은 시간이 더욱 지나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언론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언론이 사고 초기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취재하고, 사고의 여파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도했기에 피해자들이 불만을 가졌을까. 예를 들어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언론이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바람에 오보를 냈다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은 누구였는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언론은 누구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처리했는가.

세월호 보도가 얼마나 정확했고 공정했는지를 알려면 취재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신문과 방송이 제작한 뉴스의 취재원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어떠한 유형의 취재원이 어떠한 프레임의 뉴스를 전했는가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2. 이론적 논의

1) 저널리즘의 역할과 취재원 다양성

언론이 뉴스제작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원천 또는 출처는 취재원이다(Tuchman, 1978, p. 84). 언론과 취재원과의 접촉결과가 뉴스에 반영되므로 민속지학적으로 저널리즘을 연구한 여러 학자는 언론의 취재원 사용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집중분석했다(Epstein, 1973; Fishman, 1980; Gans, 2004; Sigal, 1973; Tuchman, 1978).

국내의 일부 연구자는 ‘source’를 정보원(박대민, 2015; 이준웅·김경모, 2008; 임영호·이현주, 2001; 한동섭·유승현, 2008) 또는 뉴스원(한동섭·임종수, 2001)이라고 표현한다. ‘취재원’이라는 용어는 언론과 정치적 행위자 간의 정치, 사회적 역동적 관계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체 용어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송용희, 2006) 언론단체와 언론사의 규범, 그리고 현장 기자들 역시 이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권력이나 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탐사보도에서 취재원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취재원이 비밀 제보를 하면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법정이 기자라면(Freedman, 2006/2008, 156쪽) 기자가 취재보도를 위해 처음 지나야 하는 관문은 취재원이다.

정보가 많은 취재원은 언론에 접근할 통로를 쉽고 다양하게 확보한다. 언론은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므로 정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공직자, 정치인을 주요 취재원으로 여긴다(Brown, Bybee, Wearden, & Straughan, 1987; Sigal, 1973). 취재원이 신뢰성 있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기자와의 관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와 정부기관이 가장 빈번히 규칙적으로 언론에 등장하는 이유다(임영호·이현주, 2001; Bennett, 1990; Gans, 2004, pp. 144-145).

문제는 취재원이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데서 생긴다. 기자는 정치인에게 뉴스를 기대하고, 정치인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류하는 힘을 통해 정치뉴스를 효과적으로 검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뉴스를 특정 정치인에게 의존하면 신문 기자는 취재원과 손발을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Bernays, 1928/2009, 186-187쪽). 양자가 인간적으로 친숙할수록 취재원을 비판하기 어렵고, 취재원과 밀착될수록 점점 더 취재원의 시각을 갖게 된다(이효성, 1996, 385-386쪽).

사적이며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도 기자와 취재원은 끊임없이 접촉하며 기사의 내용을 공동으로 만들어간다(윤영철, 2001). 취재원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과의 접촉은 개인 또는 조직의 주장과 이념을 세상에 알리는 수단이다. 자신이 가진 정보를 세상에 알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언론을 매개체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특정한 인물, 집단, 계층이 취재원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 뉴스의 다양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취재원이 정부, 공직자, 정치인에 편중될수록 언론은 일반 국민, 전문가, 사회단체와 같은 다양한 인물, 집단,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허친스 위원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언론인에게 필요로 하는 점은 매일 벌어지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진실되고 종합적이고 지성적인 설명이라고 강조했다(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1947).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역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 한다”고 했다.

두 위원회가 밝힌 저널리즘의 목표, 즉 종합적이고 지성적인 설명이나 건전한 여론 형성은 공동체 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다양한 목소리를 위해 다양한 집단과 계층에 발언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저널리즘 원칙은 뉴스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취재원을 전제로 한다. 연구자들은 취재원의 다양성을 뉴스에 등장하는 취재원의 숫자, 그리고 취재원의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2015년에 ‘가장 우수한 기사’(top level story)의 기준으로 4가지를 제시하면서 취재원 사용의 품질은 수용자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뉴스에 나온 취재원의 숫자로 평가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 편의 기사에 4명 이

상의 취재원이 나온 경우가 전체 분석대상의 48%였고, 취재원이 없거나 1명인 경우가 18%, 2~3명인 경우가 33%였다.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기준에 해당하는 신문기사는 11.1%로 미국신문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박재영, 2006; 이건호, 2008; 이재경, 2007).

기사품질과 관련된 또 하나의 기준은 취재원의 유형이다. 1985~1989년의 폴리처상 수상작 또는 후보작 30건, 그리고 미국탐사기자협회(IRE)의 1988년 총회에 제출된 30건의 기사를 보면 취재원 10명 중 4명 정도만이 공직자였고 나머지는 정부와 관련이 없거나 노조, 그리고 다른 이해단체를 대표하는 개인이었다(Hansen, 1991). 이와 달리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국내 44개 매체의 기사 7,761개에서는 취재원이 증권가의 애널리스트와 정부 관료에 집중되면서 비주류 경제학, 정치경제학, 경제사회학, 문화연구 등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배제되었다(박대민, 2015).

다양하지 못한 취재원은 공론장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언론이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공론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채널을 갖지 못하거나, 조직화되어있지 못하므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해야 한다(Kovach & Rosenstiel, 2014, pp. 169-192).

2) 언론규범이 정한 취재원 투명성과 현실의 괴리

언론단체와 언론사의 강령 또는 준칙은 취재원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취재원이 자유 언론의 전문적 윤리를 정당화시켜 주는 가장 오래된, 그러면서도 보도내용이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점을 믿도록 요구하는 품질관리의 보증서라는 인식의 결과다(McNair, 1998, p. 65).

뉴스품질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를 위해 언론은 강령이나 준칙에서 취재원의 투명성을 명시했다.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공 또는 조작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원칙은 상충되는 주장을 제시하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인용부호를 적절히 사용하고, 정보를 적절한 순서에 따라 구조화하는 4단계로 구체화된다(Tuchman, 1972).

미국신문편집인협회(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 ASNE)는 1922년 설립 당시, '저널리즘 규범'(canons of journalism)을 제정했고 이를 '활동원칙'(statement of principles)이라는 이름으로 1975년에 수정했다(ASNE, 1975). 미국기자협회는 ASNE의 규범을 1926년부터 빌려 사용하다가 '윤리강령'이라는 이름의 자체 규정을 1973년에 처음 만들고, 4차례 수정했다(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2014).

두 단체의 규범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취재원의 이름 또는 얼굴을 밝히고(취재원 적시) 이들의 정보와 의견을 기사에 반영(인용)하도록 명시했다. 〈뉴욕타임스〉는 취재원의 목적이나 의도가 언론의 목적이나 의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취재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기자들의 선의를 얻으려고 애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윤리강령에서 강조했다(New York Times, 2004).

객관주의를 표방하는 언론에게 취재원의 적시와 인용은 기사가 기자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완성된 결과물임을 보여주는 전략적 의례이며(Tuchman, 1978) 기사에 필수적인 증거의 형태로 기능한다(Carlson, 2009). 인용은 관찰자로서 기자가 정보를 보고 듣고 얻었음을 보여주는 도구이고, 취재원 적시는 정보의 원천과 입수방식을 보여주는 도구이므로 인용과 취재원 적시는 항상 동행하는 개념이다(박재영 · 이완수, 2007).

국내에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1957년 채택한 ‘신문윤리강령’과 1961년에 추가로 채택한 ‘신문윤리 실천요강’이 있다. 두 규정은 한국신문편집인협회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물론,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1999년 승인하고 준칙으로 삼았으므로(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2009a, 2009b)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담은 대표적인 규범이라 할 만하다. ‘신문윤리 실천요강’은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개별 언론사로는 〈한겨레신문〉이 기사의 바탕이 된 모든 정보의 출처는 최대한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취재보도 준칙에 담았다(〈한겨레신문〉, 2007).

취재원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언론은 익명 취재원에 자주 의존한다. 권력과 대기업의 관계자가 내부문제를 폭로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익명 취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신문 간부의 81%는 익명 취재원을 실명 취재원보다 덜 신뢰하지만, 87%는 기밀누설자의 익명보도가 바람직한 관행이라고 대답했다(Culbertson, 1980).

미국 언론인 로젠펠드(Harry M. Rosenfeld)는 “어떤 신문도 비밀 취재원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름값을 못한다. 비밀 취재원이 없으면 최고의 저널리즘에서도 상당 부분이 불가능할 것이다. … 우리는 비밀 취재원의 사용을 비난하고, 또 그것의 편재에 절망한다”고 말했다(Mencher, 2011, p. 318). 익명 취재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안전밸브이고 양심의 도피처로 불리어 왔지만 한편으로는 게으르고 나태한 기자들의 피난처이기도 했다(Christians, Rotzoll, & Fackler, 1987, p. 75).

언론의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익명 취재원은 진실보도에 도움이 안 된다(Swain &

Robertson, 1995).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익명으로 처리하면 수용자는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할 근거조차 갖지 못하므로 기사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Martin-Kratzer & Thorson, 2007).

국내언론은 익명 취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미국언론보다 높은 편이다(박성희, 2004; 한동섭·유승현, 2008). 심각성은 익명 취재원이 많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행이 기자 윤리에 어긋난다는 자각이 없는, 즉 그런 무감각이 오래 지속되니 익명의 취재원을 빌려 자기 생각을 쓰는 현실에 있다(김옥조, 2004, 160쪽). 무엇을 보도할 것인가라는 보도내용의 가치적 측면에 주목했지,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라는 실천규칙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관심이 적었던 결과다(김세은, 2006).

이준웅, 양승목, 김규찬, 그리고 송현주(2007)는 인용문의 사용방법에 주목했다. 직접 인용 제목을 사용한 국내 4개 신문의 기사 448건에서 제목에 직접 인용된 글이 기사 본문에 없는 경우가 60% 정도이며 특히, 직접 인용 제목의 약 38%가 익명의 정보원을 직접 인용해서 제목에 제시했다. 이런 원인에 대해 현직 언론인들은 단순한 실수나 편집 관행의 문제, 선정주의, 책임회피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취재원의 투명성 못지않게 자의적인 취재원 선택 및 활용 역시 문제가 된다. 언론인과 언론사는 자신들의 주요 역할을 수신기, 즉 다른 사람들이 만든 사건을 보도하면서 주로 전달자로 남을 뿐이라고 말하지만(Gans, 2004) 뉴스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세상의 재현이고, 모든 재현은 선택적이다(Schudson, 2011).

3) 재난보도에서 취재원의 역할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위험보다 피해에 집중하는 선정성, 그리고 정확성 및 심층성의 부족이 거론된다(박성철·이덕환, 2013; 이화행, 2014; Singer & Endreny, 1987). 특히 국내언론의 재난보도 관행에 대해서는 통곡상업주의, 고통상업주의, 재난상업주의(유승관·강경수, 2011) 나 재난의 상품화(윤태진, 2014) 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보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는 기자들의 사전준비 부족이 하나의 이유로 꼽히며(홍은희, 2012; Berrington & Jemphrey, 2003) 대안으로는 재난보도 준칙이 제시된다(김재명, 2011; 김춘식, 2011). 실제로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세월호 사고 5개월 만인 2014년 9월 16일 재난보도 준칙을 선포하고, KBS가 2015년 3월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세월호 보도의 문제는 취재 과정의 무례함과 내용의 부정확성 등 언론이 기본원칙을 지

키지 않아서 발생했는데 재난보도 준칙을 통해 이를 고치려는 노력은 잘못을 반성하고, 잘 하겠다고 다짐하는 일종의 ‘행사’로 보인다(송상근, 2015a). 정수영(2015)은 세월호 보도를 대참사라고 표현하면서 이는 대형재난이라는 특수성이나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의 부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저널리즘 규범에 대한 자각과 고민, 그리고 실천적 노력의 부재 속에서 축적된 부정적 보도 행태와 관행이 임계점에 도달하며 폭발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재난보도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국내연구는 한국에서 인적재난이 갖는 정치성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한국의 재난은 1960년대 이후의 압축적 또는 돌진적 근대화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측면이 강하다(임현진 외, 2003, 193-240쪽; 한상진, 1995). 재난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근대화 과정의 부산물이므로 정부와 정치권과 기업에 분노의 화살이 돌아간다. 국민은 재난 직후에 슬퍼하다가 원인을 제공한 대상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하므로 인명피해가 많을수록 분노가 강해지면서 재난은 정치적 사안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한다는 의미에서 재난은 지극히 정치적이다(Olson, 2000).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정치적 지도자의 암살과 똑같은 의미에서 정치적이지는 않지만 재난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감정적 상황을 만들어낸다(Pantti, 2011, p. 224).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애도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정원옥, 2014)은 재난의 궁극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적재난의 정치성은 보도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1970년대 이후 10년을 주기로 해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인적재난 6건을 골라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을 비교했더니 정치적 성향에 따른 보도의 차이가 확인됐다(송상근, 2015b). 이완수와 배재영(2015)은 세월호 사고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5월 20일까지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분석한 뒤, 정치적 이념성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슈에서조차 언론의 정파성이나 이념성이 은밀히 작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재난이 정치적 사안으로 변하고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보도방향이 달라진다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여론형성 과정에서 언론이 어느 취재원에 더 의존하고, 어느 프레임을 더 부각시키는지 중요해진다. 취재원이 되면 공개적으로 말할 힘, 세상을 규정할 힘, 반응할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Ericson, Baranek, & Chan, 1989; Franklin & Carlson, 2011, p. 2).

언론은 여기서 두 가지 원칙을 조화시킬 책무를 떠안는다. 다양한 목소리를 위해 취재원을 다양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저널리즘 원칙,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대안마련을 위한 여론형성 등 ‘애도의 정치’를 위한 재난보도 준칙이다. 세월호 보

도의 취재원 중에서 생존자와 가족, 유관기관, 중앙정부의 비중이 높았고(임연희, 2014) 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취재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윤태진, 2014) 인적재난과 취재원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인적재난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고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결과이며, 실패한 시스템에는 언론이 포함된다. 현장 기자들이 피해자에 대해 사죄심리를 갖고 반성하는 모습과 언론의 구조적 문제, 즉 뉴스제작 관행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별개의 문제다.

언론의 선택에 따라 어느 정보는 수용자에게 도착하고, 어느 정보는 도착하지 않는다. 수용자는 자신에게 도착한 정보를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므로 언론이 전달하는 뉴스는 수용자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도 말해준다(McCombs, 1992).

뉴스는 취재원과의 접촉결과이므로 언론이 정부, 정치인, 권력, 대기업을 객관적이고 독립된 취재원으로 대하지 않고 유착관계를 형성하면 결과적으로 언론이 정부나 기업을 감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홍보하거나 그들의 조작에 놀아난다(이효성, 2002, 265-266쪽). 인명피해가 극심한 인적재난일수록 취재원을 통해 발휘되는 사회적 힘이 커지므로 재난 보도에 나오는 취재원의 이해가 중요하다.

3.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세월호 취재기자들은 ‘재난보도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정부 발표를 보완 취재 없이 보도하기에 바빴다’, ‘인터뷰를 요청하면 말한 대로 실을 게 아니면서 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 ‘여과 없이 정부의 발표를 보도하는 기존 언론을 불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관훈클럽, 2014).

한국언론은 소수의 취재원만으로 기사를 구성하며 익명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이는데(이재경, 2013) 평소의 제한적인 취재원 사용관행이 재난보도에서는 정부와 공직자를 주요 취재원으로 삼고, 이들의 주장을 검증 없이 소개하는 형태로 되풀이됐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세월호 보도가 언론의 규범과 윤리, 즉 저널리즘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준수했는가를 취재원을 중심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다. 우선, 언론이 사용하는 취재원의 다

양성과 투명성, 그리고 이들 취재원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 연구 문제 1: 세월호 보도의 취재원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어떻게 변하는가?
- 연구 문제 1-1: 세월호 보도의 취재원은 얼마나 다양하며 매체별, 국면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 문제 1-2: 세월호 보도의 취재원은 얼마나 투명하며 매체별, 국면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 문제 1-3: 세월호 보도의 취재원은 뉴스에서 어떠한 비중으로 처리되며 매체별, 국면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취재보도의 투명성은 취재원의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취재보도에 필요한 정보는 사실이나 의견의 형태로 취재원에게서 받지만 모든 정보를 언론이 뉴스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지면과 방송시간, 마감시간의 압박 같은 제작여건이나 언론사의 방침으로 인해 어떠한 정보는 크게, 어떠한 정보는 작게 반영되거나 제외된다.

세월호 사고는 인적재난으로 시작되었지만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사안으로 바뀌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가 뉴스에 반영되는데 1차적으로는 취재원 선택에서, 2차적으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가 뉴스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사실 또는 의견)는 직간접 인용의 형태로 반영되므로, 인용문이 어떠한 프레임을 전하는가의 문제는 뉴스의 방향이나 언론사의 방침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 연구 문제 2: 세월호 보도의 취재원은 어떠한 유형이며, 어떠한 프레임을 전하는가?
- 연구 문제 2-1: 세월호 보도의 취재원은 어떠한 유형에 속하며 매체별, 국면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 문제 2-2: 세월호 보도의 취재원은 어떠한 프레임을 전하며 매체별, 국면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분석대상과 기간

(1) 분석매체

본 연구에서는 신문 4개, 방송 2개를 분석대상으로 정했다. 신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이며 방송은 KBS와 JTBC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겨레신문〉 및 〈경향신문〉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적재난으로 시작해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변한 세월호 사고에서도 신문의 성향에 따라 보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개 신문을 분석대상으로 골랐다.

방송은 KBS와 JTBC를 대상으로 했다. KBS는 지상파 방송이고 JTBC는 종합편성채널이어서 방송의 성격, 조직과 인력운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 물적 자원에서 차이가 난다. KBS는 보도방향에 대한 유가족의 항의와 시위, 그리고 이로 인한 기자들의 파업으로 사장과 보도책임자가 물러나는 내용을 겪었다. JTBC는 한국기자협회가 1990년 기자상 제도를 신설한 이후 지금까지 7번밖에 나오지 않은 한국기자상 대상을 수상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평가가 대조적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두 방송을 비교하기로 했다.

(2) 분석기간

분석대상인 6개 언론사의 기사를 3개 국면으로 나눠 조사했다. 인적재난으로 시작한 세월호 사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 사회적 사안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보도방향의 언론사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국면 1’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한 달에 이르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언론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서 대대적인 보도에 나섰다. 4개 신문이 모두 조간이어서 2014년 4월 16일의 사고소식을 지면에서 처음 보도한 4월 17일자부터 5월 16일자까지를 분석했다. 방송은 사고가 알려진 순간부터 특보 및 특집형태로 실시간 중계에 나섰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를 대상으로 두 방송사의 저녁 메인뉴스를 분석했다.

‘국면 2’는 사고 발생 후 6개월을 전후한 기간으로 세월호 인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 구체적으로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야당 내부의 갈등이 빚어졌으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놓고 정부-여당이 야당-유가족과 대립했던 기간이다. 또 검찰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면 3’은 사고 1주기를 전후한 시점으로 언론이 피해자를 추모하는 한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을 특집형태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다뤘던 기간이다. 이외에 언론은 세월

호 배상 및 보상금 발표에 대한 유가족의 반발, 세월호 인양 결정, 1주기를 맞아 진행된 추모행사가 시위로 변하면서 생긴 갈등,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한 유가족의 불만을 소개했다.

(3) 자료수집

신문기사는 지면 PDF 스크랩서비스인 아이서퍼(EyeSurfer)에서 다운로드했다. 아이서퍼는 지면 전체 또는 개별 기사를 그림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이다. 주요 키워드로는 ‘세월호 or 사고 or 안전’을 사용했다.

분석할 자료는 신문의 A섹션에서 종합면, 사회면, 국제면으로 한정하고 경제뉴스를 주로 전하는 B섹션이나 광고특집 성격의 기타 섹션은 제외했다. A섹션에서도 문화, 종교, 스포츠 등의 주제를 다루는 지면은 기사의 주제 자체가 세월호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분석하지 않았다. 방송의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내용을 분석했다. KBS는 저녁 9시에 방영하는 <뉴스 9>을, JTBC는 같은 시간에 방영하는 <뉴스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한 기사는 4,312개였다. 신문에서는 <경향신문>이 7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조선일보> 695건, <동아일보> 660건, <한겨레신문> 651건의 순이었다. 방송에서는 KBS가 805건, JTBC가 788건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국면 1’의 기사가 3,530개, ‘국면 2’의 기사가 362개, ‘국면 3’의 기사가 420개다.

3) 분석유목

(1) 분석항목

본 연구에서는 취재보도에 필요한 정보(의견과 자료 포함)를 제공하는 사람, 조직, 단체를 취재원이라고 보았다. 하나의 기사에 동일 취재원이 여러 번 등장하면 취재원을 하나로 입력했다. 취재원 적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가 직간접 인용을 통해 확인되는 사례로 정했다. 취재원이 주체가 되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했음을 밝히는 술어(밝혔다, 말했다, 설명했다 등)가 함께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신문은 리드, 방송은 앵커멘트와 기사 본문을 종합하여 취재원이 적시됐는지를 확인했다. 리드나 앵커멘트에서 취재원의 발언으로 보이는 표현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본문에서 직간접 인용의 형태로 나오면 취재원을 적시한 경우로 보았다.

취재원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박재영과 이완수(2007)의 연구에서처럼 성과 이름이 모두 나오는 경우를 실명 취재원으로 분류했다. 기관과 단체의 이름을 정식명칭 또는 약

칭 중에서 어느 하나로 표기하면 실명 취재원으로 분류했다. 기관과 단체의 정식명칭 또는 약칭 뒤에 ‘~에 따르면’이라는 표현 역시 실명으로 분류했다.

한동섭과 임종수(2001)는 제목과 지면배치 및 지면에서 차지하는 양에 따라 인용되는 뉴스원이 중심적인 뉴스원인지, 부차적인 뉴스원인지를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취재원의 직간접 인용문이 기사의 제목과 리드에 반영됐는지를 기준으로 중심적 역할인지, 보조적인 역할인지를 구분했다.

신문에는 주제목과 부제목이 나오고, 또 주제목이 여러 줄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방송은 실제 화면에 나온 헤드라인과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의 제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주제목과 부제목의 유무, 주제목의 크기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로 했다.

- ① 제목이 한 줄인 기사에서 취재원이 밝힌 사실이나 의견이 제목에 반영됐으면 중심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면 보조로 판단했다.
- ② 주제목과 부제목의 크기가 같은 기사는 주제목이 사실상 여럿이다. 먼저 나온 제목과 나중에 나온 제목이 같은 내용을 전하거나, 두 번째 이후에 나온 제목이 처음 나온 제목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취재원을 모두 중심으로 입력했다.
- ③ 주제목이 부제목보다 큰 기사에서 부제목이 주제목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을 소개할 경우, 이와 관련된 취재원을 모두 중심으로 보았다.
- ④ 주제목과 부제목의 크기가 다른 기사에서 주제목과 부제목이 대립 또는 상반된 내용을 전하면 주제목 관련된 취재원을 중심, 부제목 관련된 취재원을 보조로 판단했다.
- ⑤ 방송기사의 제목은 실제로 TV에 방송된 화면의 제목과 인터넷 ‘다시보기’의 제목을 모두 확인해서 방송에 나온 화면의 제목을 기준으로 취재원의 비중을 정했다.

세월호 사고는 전 국민이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이므로 다양한 층위가 등장하는 사안이었다. 사고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와 유가족, 사고발생에 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과 선원,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 사고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정치권과 전문가와 단체,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으로 나눌 수 있다.

판티와 왈 요르겐슨(Pantti & Wahl-Jorgensen, 2011)은 재난보도에서 나타나는 분노의 주체를 피해자, 언론해석, 국민, 언론, 기타, 전문가, 정부, 기업, 노조, 개인 등 10개 유목으로 나눴다. 이들 유목을 참고하여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5개 층위(국민, 피해, 진단, 수습, 책임)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룹은 기업과 선원으로 나눴다. 기업 자체, 기업

표 1. 세월호 취재원의 유형

그룹	유형	세부 내용
국민	국민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피해	피해	사고로 죽거나 다친 승객과 생존자, 그들의 가족, 친척, 친구
진단	정치	국회의원, 정당과 정당 소속 인사
	단체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종교계, 일반/해양 관련 기업과 조직
	전문	대학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적 의견을 개진하는 직종
수습	고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국무총리, 장관관급, 시도지사
	실무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관련 부처와 관계자
책임	기업	청해진해운, 구원파, 유병언 일가
	선원	세월호에 탑승했던 선장, 선원, 승무원
기타	기타	위의 9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외국 지도자 등)

의 경영진 또는 실소유주와 사고선박을 직접 운항했던 선장과 선원의 처벌수위 및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의 취재원은 권한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고위직과 실무진으로 나눴다.

또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전문적 의견을 나타내는 그룹은 정치권, 단체, 전문가 등 3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정치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단체 소속인지, 개인 차원인지에 따라서 주장과 의견의 방향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5개의 그룹을 9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나서, 여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외국 대통령과 언론 등은 기타로 분류했다.

재난보도는 상황의 전달에 치중하는 보도와 책임을 묻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로 구분할 수 있다. 책임을 따지는 보도는 사고원인 및 수습 과정을 분석하는 내용과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감정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가 인용문의 형태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5개 프레임으로 분류했다.

- ① 속보: 구조상황, 대책마련, 유가족 움직임 등 현장의 사실을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전하는 뉴스
- ② 비판: 사고원인을 제공했거나 수습책임이 있는 기관, 조직, 기업, 개인을 비판, 분석 또는 해설
- ③ 감정: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나 일반 국민, 언론인이 느끼는 분노나 슬픔 등의 정서적 반응을 담은 뉴스
- ④ 미담: 승무원과 탑승객의 희생, 구조대원의 역경을 부각시키는 종류의 뉴스
- ⑤ 기타: 위의 4가지 유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뉴스

기사의 내용에 따라 단일 프레임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거나 여러 프레임이 혼재(混在)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단일 기사에 복수의 취재원이 등장하면 이들 취재원이 전하는 정보는 여러 유형의 프레임을 각각 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기사의 내용이나 취재원에 따라 여러 프레임이 섞여있으면 기사의 제목과 리드, 기사의 분량을 중심으로 파악된 중심적인 취재원의 정보를 중심으로 주요 프레임을 하나만 골라서 코딩하기로 했다.

(2) 코더 간 신뢰도

분석은 연구자와 저널리즘을 전공한 석사 출신 등 2명이 나눠서 했다. 수집, 코딩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 22 for Windows'에 입력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국면 1'에서 언론사별로 각각 40개의 기사를, 그리고 '국면 2'와 '국면 3'에서 언론사별로 각각 20개의 기사를 골라서 코더 간 신뢰도를 구했다.

우선, 두 명의 코더가 신문지면과 방송뉴스를 검토하면서 분석대상 기사의 목록을 만들고 기사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며 취재원을 적시한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를 분류했다. 그리고 취재원을 적시한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에 나오는 취재원을 순서대로 입력하며 고유번호를 매겼다. 이어서 취재원을 실명과 익명,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취재원의 유형, 기사에 나오는 취재원 인용문의 프레임 등 4개의 변인을 코더 2명이 각자 분석했다.

변인은 두 단계에 걸쳐서 분석했다. 1단계로, 세월호 사고를 처음 보도한 4개 신문의 2014년 4월 17일자 기사를 코더들이 각자 분석한 뒤에 비교했다. 변인별 일치도가 60~70% 수준이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두 차례의 미팅에서 확인하고 조정했다. 2단계 분석에서는 방송을 포함했다. 6개 언론사별로 '국면 1'에서 40개의 기사를, '국면 2'와 '국면 3'에서 각각 20개의 기사를 분석해서 신뢰도를 검증했더니 변인별 일치도가 모든 항목에서 90%를 넘었다. 크리펜도르프 알파 값은 변인별로 0.837~0.975 수준이어서 적절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4. 연구 결과

1) 세월호 보도에 나타난 취재원의 특성

(1) 취재원의 숫자

분석대상 기사 4,312건에 나오는 취재원은 9,658명으로 기사 1건당 2.2명이었다. 취재원 숫자는 사고가 발생하고 1주기에 이르는 동안에 조금씩 늘었다. 사고 초기인 ‘국면 1’에서는 취재원이 기사 1건당 평균 2.1명이었다가 사고발생 후 6개월을 전후한 ‘국면 2’에서는 2.6명으로, 그리고 사고 1주기를 맞은 ‘국면 3’에는 2.7명으로 많아졌지만 평균적으로 3명을 넘은 경우는 없었다. 매체별로는, 신문의 기사 1건당 취재원(2.6명)이 방송(1.7명) 보다 많았다. 신문의 취재원은 2.5명, 2.8명, 2.7명 등 시기별로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방송의 취재원은 1.5명, 2.2명, 2.7명으로 조금씩 늘었다.

취재원이 4명 이상 나온 신문기사는 전체의 25.8%였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는 취재원을 4명 이상 사용한 기사의 비율이 48%였다. 신문별로는 취재원이 4명 이상인 기사가 <한겨레신문> 27.6%, <조선일보> 27.1%, <동아일보> 26.4%로 거의 비슷했고 <경향신문>(22.4%)이 가장 낮았다. 취재원이 10명 이상인 기사 역시 <한겨레신문>(11개), <조선일보>(10개), <동아일보>(9개)는 비슷했고 <경향신문>(6개)이 가장 적었다. 매체의 유형이나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국내언론의 취재원 사용이 미국언론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방송을 포함해 6개 언론사 중에서 취재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신문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각각 2.7명)이었고 방송은 JTBC(1.6명)였다. 신문에서는 <경향신문>(2.4명)과 <동아일보>(2.5명)의 취재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취재원은 평균 2.6명,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도 평균 2.6명이어서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취재원의 투명성

취재원을 직간접 인용의 방법으로 드러낸 기사의 비율은 평균 86.8%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국면 1’(85.8%)보다 ‘국면 2’(90.6%)와 ‘국면 3’(91.9%)에서 취재원을 적시한 기사가 많았고, 취재원 적시비율은 신문(89.0%)이 방송(83.0%)보다 조금 높았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취재원을 적시한 경우는 평균 87.9%,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90.2%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JTBC의 취재원 적시비율(82.1%)은 분석

대상인 6개 언론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국면 1’의 기간에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앵커가 뉴스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서 앵커가 하나의 기사에 대해 짧게 멘트를 하면 기자가 사전제작 내용을 보도하는 방식으로 아이템 하나를 소화한다.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앵커와 기자가 대화를 나누며 뉴스를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앵커가 질문하고 기자가 대답하는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시간은 2~3분에 그칠 때가 많다.

평소의 예외적인 방식을 JTBC는 세월호 보도에서 일상적 포맷으로 운용했다. 오프닝 멘트에 이어 앵커와 기자가 대화하며 뉴스를 시작했다. 사고 첫 날인 2014년 4월 16일, JTBC <뉴스룸>의 첫 장면은 사고현장의 영상이었다. 이어서 당일 낮, 후배 앵커가 구조된 여학생에게 건넨 질문과 관련하여 메인 앵커가 시청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전했다.

본 뉴스로 들어가서 앵커는 취재기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사고현장과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첫 질문에 이어서 그는 5분 24초 동안 5개의 질문을 던졌다. 이날부터 5월 16일까지 앵커는 같은 방식으로 뉴스를 시작했고, 많게는 3개의 아이টে을 이렇게 처리했다. 앵커가 바뀌는 주말(5월 4일, 5월 10일, 5월 11일)만이 예외였다. 이러한 진행에서는 취재원을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취재내용을 기자가 설명하다가 취재원의 말을 끼워 넣던 평소와 달리, 앵커와 기자의 대화 위주이므로 취재원의 얼굴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기가 곤란했다. 다른 언론사보다 낮은 JTBC의 취재원 적시비율은 적시의 원칙을 무시해서라기보다는 대규모의 인적피해가 생긴 특수상황을 맞아 뉴스진행 방식에 변화를 주었던 결과라고 판단된다.

취재원 9,658명 중에서 실명은 57.5% (5,555명), 익명은 42.5% (4,103명)로 분석됐다. 시기별로 보면 실명 취재원이 53.8%, 67.3%, 74.2%로 계속 늘어난 반면, 익명 취재원이 46.2%, 32.7%, 25.8%로 크게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4개 신문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실명 취재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방송에 가장 많이 나온 실명 취재원은 KBS와 JTBC 모두 정부 관계자였지만 횟수는 고명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과 박근혜 대통령의 순이었다.

익명 취재원의 비율을 매체유형별로 비교했더니 신문이 43.8%, 방송이 39.0%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368$, $df=1$, $p<.001$). 신문에서는 <조선일보>(49.1%)와 <동아일보>(48.8%)의 익명 취재원 사용비율이 <한겨레신문>(39.0%) 및 <경향신문>(38.2%)보다, 방송에서는 JTBC(40.3%)의 익명 취재원 사용비율이 KBS(37.7%)보다 높았다.

(3) 취재원의 비중

제목과 리드가 알려주는 뉴스의 전체 방향, 즉 중심적인 내용을 전하는 취재원은 평균 63.1%에 그쳤다. 나머지 취재원(36.9%)이 제공한 정보는 제목과 리드에 반영되지 않았다. 취재원의 정보를 언론이 얼마나 비중 있게 처리하는지 확인했더니 시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40.968$, $df = 2$, $p < .001$).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제목과 리드에 반영하는 등 중심적으로 사용한 비율은 ‘국면 1’에 61.7%였는데 ‘국면 2’에 64.7%로, ‘국면 3’에 71.4%로 높아졌다. 중심적 내용을 전하는 취재원의 비율은 방송이 71.4%, 신문이 60.0%로 매체별로 차이가 있었다($\chi^2 = 107.569$, $df = 1$, $p < .001$).

취재원의 정보를 중심 또는 보조로 처리하는 비율은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13.189$, $df = 1$, $p < .001$).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취재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율(57.9%)이 <한겨레신문> 및 <경향신문>(62.1%)보다 낮은 편이었다. 신문에서 취재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반영한 비율이 높은 곳은 <경향신문>(68.4%)과 <동아일보>(60.4%)였고, 이러한 비율이 낮은 곳은 <한겨레신문>(56.0%)과 <조선일보>(55.7%)였다.

취재원이 뉴스에서 어떠한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를 시점별로 보면 신문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경향신문>은 취재원을 중심으로 처리한 비율이 ‘국면 1’에 67.5%, ‘국면 2’에 70.3%, ‘국면 3’에 72.6%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겨레신문>은 비율이 52.9%, 66.0%, 67.0%로 조금씩 높아졌고 <조선일보>도 51.8%, 70.6%, 69.1%로 비슷한 흐름이었다. <동아일보>는 60.8%, 53.2%, 65.3%로 일정하지 않았다.

방송의 경우에 취재원을 중심으로 처리한 비율은 KBS가 72.8%, JTBC가 69.9%로

표 2. 신문 취재원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분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중심	994	60.4	1,044	55.7	985	56	1,187	68.4
보조	651	39.6	831	44.3	774	44	549	31.6

표 3. 방송 취재원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분	KBS		JTBC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중심	997	72.8	891	69.9
보조	372	27.2	383	30.1

주: $\chi^2 = 2.700$, $df = 1$, $p = .100$.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chi^2 = 2.700$, $df = 1$, $p = .100$) 신문에 비해서 두 방송은 취재원의 정보를 제목이나 리드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방송은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뉴스에 충실히 반영했지만 신문은 취재원을 편의적으로 사용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KBS는 중심적 비중을 차지하는 취재원의 비율이 국면별로 71.8%, 67.1%, 84%였고 JTBC의 비율은 70.1%, 63.4%, 74.2%였다.

2) 세월호 보도에 나타난 취재원의 유형과 프레임

(1) 취재원의 유형

세월호 사고의 취재원을 10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검토해보니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chi^2 = 286.756$, $df = 45$, $p < .001$).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실무자 그룹(25.9%)과 피해자 및 유가족(20.5%)이 취재원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취재원 유형은 국면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781.789$, $df = 18$, $p < .001$). 피해자와 유가족이 ‘국면 1’에서는 전체의 19.1%였다가 ‘국면 2’에서 24.0%, ‘국면 3’에서 26.3%로 많아졌다. 사고 1주기가 다가오면서 특집기사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사연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신문의 정치적 성향과 취재원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었다($\chi^2 = 39.549$, $df = 9$, $p < .001$).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회단체를 취재원으로 사용한 비율(8.8%)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평균(6.5%) 보다 높았고, 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는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과 선원을 취재원으로 사용한 비율(2.3%)이 <동아일보>

표 4. 신문 취재원의 유형

구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민	209	11.1	179	10.9	170	9.7	206	11.9
피해	364	19.4	390	23.7	376	21.4	359	20.7
정치	169	9	170	10.3	164	9.3	193	11.1
단체	129	6.9	100	6.1	169	9.6	138	7.9
전문	205	10.9	180	10.9	199	11.3	163	9.4
고위	100	5.3	76	4.6	82	4.7	82	4.7
실무	524	27.9	380	23.1	475	27	446	25.7
기업	40	2.1	44	2.7	13	0.7	32	1.8
선원	27	1.4	46	2.8	19	1.1	15	0.9
기타	108	5.8	80	4.9	92	5.2	102	5.9

표 5. 방송 취재원의 유형

구분	KBS		JTBC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민	160	11.7	102	8
피해	221	16.1	267	21
정치	50	3.7	96	7.5
단체	183	13.4	110	8.6
전문	157	11.5	101	7.9
고위	61	4.5	78	6.1
실무	341	24.9	339	26.6
기업	52	3.8	45	3.5
선원	46	3.4	40	3.1
기타	98	7.2	96	7.5

$\chi^2 = 61.706$, $df = 9$, $p < .001$.

보>와 <조선일보>의 평균(4.5%) 보다 낮았다.

KBS와 JTBC의 취재원 사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61.706$, $df = 9$, $p < .001$). 두 방송사 모두 10개 유형의 취재원 중에서 실무자 그룹을 취재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JTBC는 실무자 그룹에 이어 피해자를 취재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지만 정부 취재원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JTBC에 나오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고위 인사(6.1%)는 KBS(4.5%) 보다 오히려 많았다. 기업과 선원이 취재원으로 나온 비율도 JTBC(6.7%)와 KBS(7.2%)는 거의 비슷했다. KBS는 일반 국민(11.7%)과 전문가(11.5%) 등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취재원이 많았다. JTBC에 취재원으로 나오는 일반 국민은 8.0%, 전문가는 7.9%였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뉴스에 나오는 비율과 형식에서 KBS와 JTBC는 대조적이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취재원으로 나온 비율부터 JTBC(21.0%)와 KBS(16.1%)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외형적인 차이는 뉴스의 내용으로 이어졌다.

KBS는 유가족 보도를 대부분 기사 1건당 2분 정도의 리포트로 구성했다. 유가족을 직접 인터뷰한 사례는 7건으로 이 중에서 3건은 사고 첫날과 이틀째에 혼란에 빠져 슬퍼하는 모습을 소개한 경우다. 나머지는 장례절차, 손녀를 그리워하는 외할아버지의 심정,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러 팽목항을 다시 찾은 희생자 가족, 일반인 희생자 가족의 소외감을 담은 인터뷰였다. 그 외의 28건은 유가족 대표의 공식 브리핑하는 장면을 담은 기자의 리포트였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나 절규를 있는 그대로 방송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들의 주장을 짧은 인용문으로만 처리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언론사가 정한 보도의 방향

에 취재원의 목소리를 맞추는, 즉 취재원을 전략적 의례로 활용하는 관행을 보여줬다.

반면에 JTBC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육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내용을 적극 전달했다. 사고 당일에는 실종자 가족인 김중열 씨를 중계차로 연결해 약 11분 동안 인터뷰했다. 사고 4일째(4월 19일)와 12일째(4월 27일)에는 안산 단원고의 학부모 대표인 최대광 씨와 각각 6분 정도의 인터뷰를 했다. 사고 직후부터 2주 동안 JTBC가 유가족을 직접 인터뷰한 사례는 6건이었다. 또 형식면에서 기자와 앵커가 질문을 수차례 주고받는 방식으로 뉴스를 진행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유가족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감정적인 반응, 전문가의 확인되지 않거나 일방적인 주장이 포함되기도 했다.

(2) 취재원 인용문의 프레임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는 직간접 인용의 형태로 뉴스에 반영된다. 인용문이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했더니 5개 프레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216.555$, $df = 20$, $p < .001$). 가장 많이 등장한 프레임은 속보(62.2%)였으며, 다음으로는 비판(21.6%)과 감정(13.1%)의 순이었다.

인용문의 프레임 변화는 시점별로도 차이가 있었다($\chi^2 = 111.122$, $df = 8$, $p < .001$). 속보 프레임이 ‘국면 1’에 63.2%, ‘국면 2’에 64.8%, ‘국면 3’에 53.6%로 조금씩 줄었고 비판 프레임은 같은 기간에 20%, 24%, 30%로 조금씩 늘었다. 감정 프레임은 사고 초기의 13.8%에서 6개월을 전후한 시기에는 8.2%로 줄었으나 사고 1주기를 전후해서는 12.7%로 다시 늘었다.

신문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인용문의 프레임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있었다($\chi^2 = 17.193$, $df = 4$, $p < .05$). 속보 프레임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평균 61.2%,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평균 57.6%였고 감정 프레임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평균 14.2%,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15.2%로 나타났다. 또 비판 프레임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21.4%,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24.6%였다.

방송 인용문의 프레임 변화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 = 19.689$, $df = 4$, $p < .05$). 사고 초기부터 1주기까지를 종합하면 KBS의 속보 프레임(72.8%)은 JTBC(66.1%)보다 많았다. 이와 달리 비판 프레임의 인용문은 JTBC(21.1%)가 KBS(14.8%)보다 높았고, 감정 프레임의 인용문 역시 JTBC(9.3%)가 KBS(8.5%)보다 많이 보도했다. KBS의 비판 프레임은 13.7%, 15.8%, 23.6%로 계속 늘었지만 JTBC의 비판 프레임은 18%, 23.7%, 36%로 어느 국면에서든 KBS보다 높았다. 취재원의 유형과 이들이 전하는 인

용문의 프레임을 종합하면 KBS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주장을 중심으로 속보 프레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고, JTBC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중심으로 비판적 내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전달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7일 팽목항을 찾았을 때, 취재원으로서 실제 목소리가 나오는 횟수는 박 대통령이 5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회, 유족이 1회였는데 박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유가족이 박수를 치는 장면이 박수소리와 함께 2회 나왔다. 반면에 같은 날짜의 JTBC에서는 박 대통령의 육성이 1회 나오는 동안 유족이 “우리 애들 살려내! 왜 이제 오느냐고!”라고 울부짖으면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방송됐다.

뉴스에 담긴 정보를 실명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으로 나눠서 봤더니 차이가 나타났다. 실명 취재원이든 익명 취재원이든 가장 많이 전한 내용은 속보 프레임이었고, 다음은 비판 프레임과 감정 프레임이었다. 하지만 이들 프레임의 비율은 취재원이 실명이나, 익명이나에 따라 달랐다.

실명 취재원이 전하는 내용 중에서 속보 프레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면 1’에서 63.2%였다가 ‘국면 2’에 65.0%, ‘국면 3’에 54.4%로 줄었다. 실명 취재원의 비판 프레임 비율은 25.1%, 26.3%, 30.1%로 계속 높아졌다. 실명 취재원과 마찬가지로 익명 취재원이 가장 많이 전한 내용은 속보 프레임의 인용문이었지만 이 비율이 63.2%, 64.4%, 51%로 계속 낮아졌고, 비판 프레임의 비율은 14.1%, 19.3%, 29.9%로 크게 높아졌다.

5. 결론 및 함의

세월호 보도의 취재원을 중심으로 국내언론의 뉴스제작 관행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하나는 세월호 뉴스에 나온 취재원의 특성이며, 다른 하나는 세월호 취재원이 전하는 뉴스의 특성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뉴스에 나오는 취재원의 숫자는 기사 1건당 2.2명으로 나타났다. 취재원이 4명 이상인 기사는 평균 25.8%로 미국의 조사(48%) 보다 매우 적어 국내언론의 취재원이 매우 제한적임을 다시 보여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취재원(평균 2.6명)은 <한겨레신문> 및 <경향신문>(평균 2.6명)과 같아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송에서도 KBS(1.7명)와 JTBC(1.6명)의 취재원 숫자가 거의 같았다.

둘째, 취재원을 직간접 인용의 형태로 밝힌 비율은 86.8%였다. 또 취재원은 57.5%가 실명이고, 42.5%가 익명이어서 언론단체와 언론사가 정한 원칙이 뉴스제작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익명 취재원의 비율은 신문(43.8%) 이 방송(39%) 보다 높았고, 신문별로는 <조선일보>(49.1%) 와 <동아일보>(48.8%) 가 <한겨레신문>(39%) 과 <경향신문>(38.2%) 보다 높았다. JTBC의 익명 취재원 비율은 40.3%, KBS는 37.7%였다.

셋째,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사의 제목이나 리드에 반영한 비율은 평균 63.1%에 그쳤다. 나머지 뉴스에서는 취재원의 정보를 제목이나 리드에 넣지 않고 보조적으로 활용했다. 전체 뉴스의 40%는 취재원이 전하는 정보를 뉴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만 활용하고 비중 있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취재원의 정보를 제목이나 리드에 반영한 비율은 방송(71.4%) 이 신문(60%) 보다 높았다. 취재원의 정보를 가장 비중 있게 처리한 매체는 신문에서 <경향신문>(68.4%), 방송에서 KBS(72.8%)였다.

넷째, 취재원의 10가지 유형을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인(국민), 피해자와 유가족(피해), 사고에 1차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선원(기업),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부처(정부), 그리고 의견을 나타내거나 전문적 설명과 진단을 하는 정치인·사회단체·전문가(진단) 등 5개 그룹으로 다시 분류했더니 정부에 속한 취재원(30.9%) 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진단(27.7%), 피해(20.5%), 국민(10.6%), 기업(4.3%) 순이어서 일반 국민과 피해자를 합쳐도 전체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방송의 경우에 10개 유형 가운데 실무자가 가장 많은 점은 공통적이었지만(KBS 24.9%, JTBC 26.6%) 피해자와 유가족 비율(JTBC 21.0%, KBS 16.1%)은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취재원의 인용문을 5개 프레임으로 나눠서 봤더니 현장상황이나 사안의 진행 과정을 전하는 데 치중하는 속보 프레임이 62.2%로 가장 많았다. 사고수습 및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 프레임은 21.6%에 그쳤다. 속보 프레임의 인용문은 사고 초기 63.2%에서 1주기에 53.6%로 줄어든 반면, 비판 프레임의 인용문은 같은 기간에 20%에서 30%로 늘었다. 또 취재원의 투명성과 인용문 프레임의 관계를 분석했더니 실명이든 익명이든 속보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 국면별로 비교하면 실명 취재원이 전한 비판 프레임은 1년 사이에 25.1%에서 30.1%로, 감정 프레임은 9.1%에서 12.2%로 늘었다. 익명 취재원의 경우에도 비판 프레임은 14.1%에서 29.9%로 증가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언론단체와 언론사가 강령, 사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만든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들 규범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한다.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뉴스에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은 보도가 정확성,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세월호 보도에서는 이러한 저널리즘 원칙의 부재(不在) 및 혼재라는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저널리즘 원칙의 부재는 뉴스제작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키지 않는 관행을 의미한다. 취재원의 숫자가 적고, 특정집단에 편중되면 뉴스의 심층성과 다양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 취재원을 밝히는 방법에서 실명이 원칙이고 익명이 예외이어야 하지만, 세월호 보도에 서는 익명이 40%를 넘어 원칙과 예외의 구분이 무의미했다.

심각성은 인적, 물적인 면에서 유리한 언론사가 오히려 저널리즘 원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발행부수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신문이며, KBS는 국내 지상파 3사의 내용, 편성, 운영실태를 비교하는 방송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대표 방송이다. 취재인력과 매출액 또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JTBC에 비해서 많다. 취재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데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겨레신문〉 및 〈경향신문〉에 비해서 익명 취재원을 더 많이 활용했다. 취재원 숫자 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겨레신문〉 및 〈경향신문〉과, KBS는 JTBC와 비슷했다.

저널리즘 원칙의 혼재는 뉴스제작 과정에서 규범을 부분적, 편의적,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평소에는 지키다가 특수상황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규범이라 할 수 없다. 저널리즘 원칙을 보완하는 범위 안에서 재난보도 준칙을 운용해야지, 저널리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재난보도 준칙을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JTBC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취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면에서 KBS보다 적극적이었다. 한국기자상 심사평이 밝혔듯이 “사건 현장과 유족들을 지속적으로 찾아 언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노력은 재난상황에서 희생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려는 보도방향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유가족의 흥분된 목소리와 전문가의 부정확한 주장을 여과 없이 방영한 점은 비판받기 쉬운 대목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인적재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저널리즘 원칙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특정 주제를 시점의 변화와 함께 검토했으며, 동일 주제에 대해서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비교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세월호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재난보도 준칙만이 아니라 저널리즘 원칙과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재난보도에 대한 기존 논의가 재난이라는 특수상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대안 역시 재난보도 준칙에서 찾았던 반면에 본 연구는 취재원의 다양성과 투명성 같은 저널리즘 원칙의 준수여부에 주목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결과, 특정 취재원への 의존 및 불투명한 취재원 처리 등 한국언론의 문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뿌리 깊은 관행의 결과임을 확인했다.

둘째, 특정 주제에 대한 언론보도를 검토하면서 시점에 따른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월호 보도의 문제는 일회성이 아니고, 단기간에 해결가능한 수준이 아니므로 언론의 뉴스제작 방식, 특히 잘못됐지만 오래된 관행을 근본에서부터 바꾸야 한다는 논거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셋째, 동일 주제에 대해 신문과 방송이 취재원을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하는지를 동시에 비교했다는 특징이 있다. 신문과 방송은 언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므로 두 매체에 모두 적합한 해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특성과 역할이 다른 만큼 각각의 매체에 적합한 해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월호 보도로 한국기자상 대상을 받은 JTBC 보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확인해 방송뉴스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뉴스의 신뢰도와 품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널리즘 원칙의 준수여부를 반영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했다. 뉴스품질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기자상 심사기준이 언론단체마다 다르므로 1차적으로 뉴스품질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실무 작업이 필요하며, 언론단체의 우수기사 심사기준에 저널리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또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한국언론의 문제가 오래된 관행의 결과이므로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수습기자, 일반기자, 그리고 제작간부를 위한 직급별 재교육을 통해 되새길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기사유형과 작성법에 치중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취재원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대하며,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고, 인용문은 어떻게 만드느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원칙의 이해 및 실습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언론의 문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라면, 즉 뉴스제작 과정에 본질적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날 즉각적인 방법을 찾기 힘들다면 제 자리를 찾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세는 사실과 수용자에 대한 겸허함과 인내심이다. 언론이 재현하는 사실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독자와 시청자에게 정확한 기사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에 비해 저널리즘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미국에서조차 언론이 사회에 대해 불완전한 그림을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데 그치므로 다관점적 뉴스(multi perspectival news)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Gans, 2004).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뉴스제작이 제한된 인력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한다.

한계와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겸허함은 뉴스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하는

대 대안과 해법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인정해야 한다. 관행은 오랜 시간 속에서 축적된 경험의 산물이므로 여기서 벗어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된다. 해법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뉴스를 제작하는 언론사, 언론단체, 기자와 간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고민하면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언론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수용자에 대한 봉사이며 (Gieber, 1960) 최우선적인 충성 대상은 시민들이다 (Kovach & Rosenstiel, 2014). 수용자에 대한 봉사, 시민에 대한 충성, 이 두 덕목을 제작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할지가 현재의 한국언론에 중요한 시점이다. 언론의 존재이유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모든 언론 구성원이 성찰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다는 점에서 세월호 사고는 한국언론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1주기에 이르는 기간을 3개의 국면으로 나눠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분석대상 매체와 기간, 검토한 기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못한 부분은 ‘왜’라는 문제이다. 한국언론은 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왜 그렇게 취재원을 제한된 범위에서 활용해 뉴스의 다양성을 떨어뜨리며, 왜 그렇게 편향적인가. 해법은 제작 과정에 대한 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병행해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취재원 활용이 제한되고, 보도가 편향적이었다는 결과를 만든 근본원인을 파악해야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해법의 모색이 가능하다.

■ 참고문헌

- 관훈클럽 (2014). 재난보도의 현주소와 과제: 세월호 보도를 중심으로. <관훈저널>, 통권 131호, 10-58.
- 김세은 (2006). 민주주의와 언론의 신뢰: ‘옳은’ 언론과 ‘좋은’ 언론에 대한 이론적 모색. <한국언론학보>, 50권 5호, 55-78.
- 김옥조 (2004). <미디어 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재명 (2011). 재난보도와 취재안전 시스템: 범언론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되어야. <신문과 방송>, 485호, 24-30.
- 김춘식 (2011). <글로벌 시각에서 본 한국 언론의 재난 보도>. 한국언론진흥재단 토론회 자료집.
- 박대민 (2015).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의 정보원 및 인용문 분석: 경제 저널리즘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학보>, 59권 1호, 37-61.
- 박성철·이덕환 (2013). 구미 유독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보도 연구. <한국방송학보>, 27권 5호, 86-123.
- 박성희 (2004). <신문 사회면 비교 분석>. 서울: 미디어연구소.

- 박재영 (2006). 뉴스 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신문 1면 머리기사 분석. 한국언론재단 (편). <한국의 뉴스미디어 2006> (147-220쪽).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박재영 · 이완수 (2007). 인용(quotation)과 취재원 적시(attribution)에 대한 한미(韓美) 신문 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439-468.
- 송상근 (2015a). 일탈과 비판의 악순환,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관훈저널>, 135호, 35-42.
- 송상근 (2015b). 재난보도에서의 분노표출 탐구. <언론학연구>, 19권 1호, 115-141.
- 송용희 (2006). 한국 유력 일간지와 정치적 행위자 간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 2004년 국가보안법 논쟁분석을 통한 취재원 연구 및 1, 2차 규정자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언론과 사회>, 14권 1호, 43-78.
- 유승관 · 강경수 (2011).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재해 뉴스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연구>, 76호, 140-169.
- 윤영철 (2001). <한국민주주의와 언론>. 서울: 유민문화재단.
- 윤태진 (2014). 방송사의 세월호 참사 보도. <문화과학>, 79호, 192-212.
- 이건호 (2008). 한·미 신문 기사의 심층성과 신뢰도 및 독창성 분석: 6개 한국 신문과 2개 미국 신문 1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5호, 107-129.
- 이완수 · 배재영 (2015). 세월호 사고 뉴스 프레임의 비대칭적 편향성: 언론의 차별적 관점과 해석 방식. <한국언론정보학보>, 71호, 274-298.
- 이재경 (2007). 한국 언론과 글로벌 스탠더드. 임상원 · 김민환 · 양승목 · 이재경 · 임영호 · 윤영철 (편), <민주화 이후의 한국언론> (183-231쪽). 파주: 나남.
- 이재경 (2013). <한국형 저널리즘 모델: 한국 저널리즘 선진화를 위한 성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준웅 · 김경모 (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67호, 9-44.
- 이준웅 · 양승목 · 김규찬 · 송현주 (2007). 기사 제목에 포함된 직접 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64-90.
- 이화형 (2014).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 보도 경향 연구. <언론학연구>, 18권 2호, 157-183.
- 이효성 (1996). <한국언론의 좌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효성 (2002). <언론과 민주정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임연희 (2014).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25권 4호, 179-201.
- 임영호 · 이현주 (2001). 신문기사에 나타난 정보원의 권력 분포: 1949-1999년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분석. <언론과학연구>, 1권 1호, 300-330.
- 임현진 외 (2003).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수영 (2015). '세월호 언론보도 대참사'는 복구할 수 있는가?: 저널리즘 규범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론적 성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11권 2호, 56-103.
- 정원옥 (2014).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애도의 정치. <문화과학>, 79호, 48-66.
- 한겨레신문 (2007). 한겨레 취재보도 준칙.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187473.html>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2009a). 신문윤리강령. URL: <http://www.editor.or.kr>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2009b). 신문윤리 실천요강. URL: <http://www.editor.or.kr>
- 한동섭 · 유승현 (2008).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에 관한 연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권 4호, 702-737.
- 한동섭 · 임중수 (2001). 미디어의 뉴스원 활용과 헤게모니 투쟁에 대한 고찰: 북한보도에서의 뉴스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7-56.
- 한상진 (1995). 광복 50년의 한국사회: 돌진형 근대화로부터 성찰적 근대화로. <사상>, 25호, 140-170.
- 홍은희 (2012). 언론사 조직문화와 재난보도 취재 관행. <사회과학연구>, 19권 2호, 151-178.
- 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ASNE) (1975). Statement of principles. Retrieved from <http://asne.org/content.asp?pl=24&sl=171&contentid=171>
- Bennett, W. L. (1990). Toward a theory of press-state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mmunication*, 40(2), 103-127.
- Bernays, E. L. (1928). *Propaganda*. 강미경 (역) (2009). <프로파간다>. 서울: 공존.
- Berrington, E., & Jemphrey, A. (2003). Pressures on the press reflections on reporting tragedy. *Journalism*, 4(2), 225-248.
- Brown, J. D., Bybee C. R., Wearden, S. T., & Straughan, D. M. (1987). Invisible power: Newspaper news sources and the limits of diversity. *Journalism Quarterly*, 64(1), 45-54.
- Carlson, M. (2009). Dueling, dancing, or dominating? Journalists and their sources. *Sociology Compass*, 3(4), 526-542.
- Christians, C. G., Rotzoll, K. B., & Fackler, M. (1987). *Media ethics: Cases and moral reasoning* (2nd ed). New York, NY: Longman.
-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1947). *A free and responsible press*. Chicago Press, IL: University of Chicago.
- Culbertson, H. M. (1980). Leaks: A dilemma for editors as well as officials. *Journalism Quarterly*, 57(3), 402-535.
- Epstein, E. J. (1973). *News from nowhere: Television and the news*. New York: Random House.
- Ericson, R. V., Baranek, P. M., & Chan, J. B. (1989). *Negotiating control: A study of news sourc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Fishman, M. (1980). *Manufacturing the news*.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 Franklin, B., & Carlson, M. (Eds.) (2011). *Journalists, sources, and credibility: New perspectives*. New York, NY: Routledge.
- Freedman, S. G. (2006). *Letters to a young journalist*. 조우석 (역) (2008). <미래의 저널리스트에게>. 서울: 미래M&B.
- Gans, H. J. (2004).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25th anniversary ed.).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Gieber, W. (1960). Two communicators of the news: A study of the roles of sources and reporters. *Social Forces*, 39(1), 76-83.
- Hansen, K. A. (1991). Source diversity and newspaper enterprise journalism. *Journalism Quarterly*, 68(3), 474-482.
- Kitch, C. L., & Hume, J. (2008). *Journalism in a culture of grief*. New York, NY: Routledge.
- Kovach, B., & Rosenstiel, T. (2014).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NY: Three Rivers Press.

- Lippmann, W. (2008). *Liberty and the new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tin-Kratzer, R., & Thorson, E. (2007). Use of anonymous sources declines in U.S. newspaper. *Newspaper Research Journal*, 28(2), 56-70.
- McChesney, R. W. (2002). September 11 and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US journalism. In B. Zelizer & S. Allan (Eds.). *Journalism after September 11* (pp. 91-100). New York, NY: Routledge.
- McCombs, M. E. (1992). Explorers and surveyors: Expanding strategies for agenda-setting research. *Journalism Quarterly*, 69(4), 813-824.
- McNair, B. (1998). *The sociology of journalism*.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cNair, B. (2011).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communication*. New York, NY: Routledge.
- Mencher, M. (2011). *News reporting and writing* (12th ed.). New York, NY: McGraw-Hill Education.
- New York Times (2004). Ethical journalism.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who-we-are/culture/standards-and-ethics>
- Olson, R. S. (2000). Toward a politics of disaster: Losses, values, agendas, and blame.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 18(2), 265-287.
- Pantti, M. K. (2011). Disaster news and public emotions. In K. Döveling, C. v. Scheve, & E. A. Konjin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emotions and mass media* (pp. 221-236). New York, NY: Routledge.
- Pantti, M. K., & Wahl-Jorgensen, K. (2011). 'Not an act of god': Anger and citizenship in press coverage of british man-made disasters. *Media, Culture & Society*, 33(1), 105-122.
- Pew Research Center (2015). State of the news media 2015. Retrieved from <http://www.journalism.org/files/2015/04/FINAL-STATE-OF-THE-NEWS-MEDIA1.pdf>
- Ryfe, D. M. (2012). *Can journalism survive?: An inside look at American newsrooms*. Malden, MA: Polity Press.
- Schudson, M. (2011). *The sociology of news* (2nd ed.).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 Sigal, L. V.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The organization and politics of newsmaking*. Lexington, MA: D.C. Heath and Company.
- Singer, B. E., & Endreny, P. (1987). Reporting hazards: Their benefits and costs. *Journal of Communication*, 37(3), 10-26.
-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2014). Code of ethics. Retrieved from <http://www.spj.org/ethicscode.asp>
- Swain, B. & J. Robertson (1995). The washington post and the woodward problem. *Newspaper Research Journal*, 16(1), 2-20.
-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679.
- Tuchman, G. (1978). *Making news*. New York, NY: The Free Press.

최초 투고일 2016년 6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6년 9월 23일

논문 수정일 2016년 10월 6일

A Study of Sourcing Patterns in the News Coverage of the Ferry Sewol Disaster

Sangkeun Song

Visiting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starts from the view that the problem of Korean media not abiding by the journalism ethics, which was demonstrated during the Ferry Sewol coverage. For this, A-section of four daily newspapers and evening news of two broadcasting stations, totalling up to 4,312 news stories were studied. In consideration of Ferry Sewol sinking turning from man-made disaster into a politically controversial issue, every news stories were categorized and examined in three stages: one month, 6 months, one year after the disaster. The characters and role of news sources in Ferry Sewol disaster coverage are summed up as the following. Firstly, news sources were limited, untransparent, and merely remained as an secondary. Secondly, news delivered by the sources tended to be government centered, above 60% of them were usually within a breaking news frame, and a critical frame using anonymous sources has surged. Such problems of Korean media can be explained via the absence and confusion of the principle of journalism. If these problems were not to be repeated, Korean media must improve its news making practice. Improving sourcing patterns would be the stepping stone.

Keywords: journalism, news sources, Ferry Sewol disaster, journalism ethics, disaster reporting guidelines